「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1호(2018 봄): 281-306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2 No.1 (2018 Spring)
http://dx.doi.org/10.20484/klog.22.1.12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 태 형**
최 정 인***
정 세 희****
문 명 재*****

국문요약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발표하고 있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질과 삶의 질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현대 사회의 주요 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효과성과 정부의 규모,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인구수, 1인당 GDP로 나타났고, 정부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업무 처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생태계 건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정부의 질, 정부의 규모,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 삶의 만족도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세계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 국가별로 국가경쟁력이나 정부의 역량을 측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세계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도 다양한 측정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7636)
** 제1저자
*** 제2저자
**** 제3저자
***** 교신저자

지표를 개발하고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과 정부의 질이 우수함을 입증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사회발전 지표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Schneider, 1975), 여러 국제기구들이 발표하고 있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질과 삶의 질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현대 사회의 주요 논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여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정부활동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해당 지역주민의 낮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변의 지방정부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다양한 국가지표 개발로 인해 다른 국가의 정부 간 비교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가능해졌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국가의 지방정부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정책, 모범 사례 등을 모방하고 착안하여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범위를 국내 인근 지역이 아닌 전 세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Pawar & Cox, 2013).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교육수준이나 건강, 신뢰, 환경, 문화, 삶의 만족도 같은 현대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요소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성장지표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을 반영하고(서문기, 2015),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최종 목표인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정부의 활동에 따른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명철, 2013; Glaser et al., 2000). 또한 좋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단순히 대응하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Putnam, 1993), 국민 삶의 질은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다음의 연구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질과 정부의 규모는 국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정부의 질과 정부의 규모가 미치는 영향이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에 다르게 나타나는가? 셋째,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나는가? 이와 같이 정부의 질과 정부의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정부의 질과 규모,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또한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부의 질과 규모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의 질과 삶의 질

1) 정부의 질

정부의 질은 국민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삶의 질은 정부의 국정운영의 목표이자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배정현, 2014: 254).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부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는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매년 IMD, WEF의 순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각국의 정부에서 지표를 활용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넘어서 '정부의 역량', '정부의 질'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김태형·장용석, 2014: 179).

1980년대 후반에는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정부의 질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Acemoglu & Robinson, 2008), 최근에는 정치와 국가의 관료제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Dahlberg et al., 2011). 일반적으로 정부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경제발전, 민주주의, 법치, 반부패 등이 있고, 이런 지표를 통해 정부의 질을 측정해왔다(김희강, 2011). 정부의 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었고,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국가 역량, 좋은 정부 등의 개념과 함께 논의되어 왔다. 연구 초기에는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부가 질이 높다고 정의하기도 하였다(La Porta et al., 1999). 또한 Knack(2002)과 같이 정부의 질을 경제적·관리적 측면에서 측정하거나, 정부의 질로서 정부의 역량을 강조하며 정부효과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자산관리, 전략적 인사관리, 정보기술관리, 조직관리 및 협력체계, 성과중심 관리 등 행정역량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최상옥, 2012). 한편, Rothstein & Teorell(2008)은 좋은 거버넌스의 모호성과 조작화 및 지표설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질의 핵심으로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강조하였다. 이때, 불편부당성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공권력으로의 접근과 공권력의 행사 모두를 측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의 질을 세부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othstein & Teorell, 2008: 169-170). Rothstein & Teorell(2008)의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개념이 국가의 권력 형성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라면 정부의 질의 개념은 국가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좋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야 한다(Rice, 2001).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의 효과성과 정치 참여를 위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도수관, 2015: 105). 이와 더불어 정

부의 질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좋은 정부'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수(Governance Indicator)'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김두래, 2012; 박종민·장용진, 2012; 배정현, 2014; Kaufmann et al., 2008). 박종민 외(2012)의 연구에서는 좋은 정부를 효과적인 정부, 준법적인 정부, 그리고 부패가 통제된 정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6가지 차원 중에서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법의 지배(rule of law) 및 부패 통제(control of corruption) 등 3가지 차원으로 정부의 질을 측정한다. 김두래(2012)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이 정치체제의 특성과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고 정책의 집행 및 산출,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관련된 정부기관과 기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치체제의 투입 측면과 거버넌스 지표는 배제되어 있다. 즉, 거버넌스 지표 중 책임성과 정치적 안정은 제외하고,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 통제의 조합으로 '정부의 질' 변수를 구성했다. 배정현(2014)의 연구에서도 World Bank의 거버넌스 정의를 활용하여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 통제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Kaufmann et al.(2009)은 정부 권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행사되는지 여부, 정부 권력이 얼마나 규칙과 법에 따라 행사되는지 여부, 그리고 정부 권력의 행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좋은 정부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의 질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다. 정부의 질은 평가 기준에 따라 그 의미가 상이하며, 기준은 '좋은 정부'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공통적으로 '거버넌스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 개념을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삶의 질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논의는 심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유사한 개념으로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이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거나(배정현, 2014: 250), 삶의 질을 행복, 도덕, 만족감 등 세 가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보거나(Stock et al., 1986), 행복이 감정적 차원의 삶의 질을 반영하고 삶의 만족은 평가적 차원의 삶의 질을 반영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박종민·김서용, 2002). 과거 근대사회에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경제성장을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배정현, 2014: 250)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복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 체계 안에서 자신의 목표나 기대, 관심에 대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각이라고 정의하고 있고(WHO, 2004), 많은 연구에서 삶의 질은 주관적인 국민의 인식과 객관적인 사회적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다차원적 복합 구성물로 이해하고 있

다(Diener & Suh, 1997; Lin, 2013).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크게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객관적 측면에 중점을 둔 연구에서는 소득이나 교육수준, 지위, 건강 등의 사회적 요건을 토대로 비교적 객관적이며 평가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반면에, 주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사회적 욕구 충족이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를 주요 요인으로 설명한다(서문기, 2015). 또한 정신적 부문은 개인의 삶의 만족, 행복을 포함하며, 사회적 부문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 환경에 대해 안전을 포함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병섭 외(2015)의 연구에서도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을 구분하고 있다. 주관적 삶의 측면에서는 개인적 인식과 판단, 즉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Bagdoniene(2000)의 포괄적 삶의 질 모형(universal quality of life model)에 따르면 깨끗한 환경, 인권, 정치 등의 광의의 삶의 질과, 일, 가족의 삶의 수준, 주택 등 외부적인 삶의 질, 그리고 가족, 인간관계 등의 인간관계의 질, 마지막으로 신체나 정신 등 개인적 삶의 질로 구분하고 있다. Coggburn & Schneider(2003)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할 때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는데 행복, 자유, 실용, 정체성 등 개인적·사회적 관점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교육, 건강, 가족관계, 교통, 환경, 정치참여, 경제적 상황, 범죄 등을 활용하고 있다. Zagorski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32개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이 정신적 부분의 행복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교육이나 소득과 같은 재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의 주관적 웰빙이 더 적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holistic)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환경과 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결정되며(Hollar, 2003), 각 삶의 영역에서의 효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정신적 부문,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수준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건강,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과 같은 사회 · 경제적 특성 등이 포함된 개념인 동시에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Frey & Stutzer, 2000). 여기서 정신적 부문은 개인의 삶의 만족, 행복을 포함하며, 사회적 부문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 환경에 대해 안전을 포함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부문은 평가적 차원으로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그리고 건강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Hollar(2003)와 Andrews & Withey(1976)의 개념을 수용하여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즉, 삶의 질은 건강, 소득, 교육, 삶의 만족도와 같이 국민의 삶과 연관된 객관적·주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내외 학자들이 삶의 질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측정지표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와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EIU의 삶의 질 지수(Quality-of-Life Index) 등이 있다.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

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하여 각 국가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이다. 이는 인간의 행복이나 발전 정도가 소득수준에 비례하지 않고, 소득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지수이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는 주거,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건강, 치안 등 개별 국가에서 국민이 처한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11개 영역에서 2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연구소(EIU)가 발표한 삶의 질 지수(QLI: Quality of Life Index)는 기대수명, 이혼율, 커뮤니티 생활, 1인당 GDP, 정치안정 및 치안 등급, 실업률, 성차별, 정치 및 시민 자유 지수 등을 토대로 측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에서는 2007년부터 세계 번영 지수(Legatum Prosperity Index)를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는 경제, 기업가 정신, 거버넌스, 교육, 보건, 안전,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 환경 등의 9가지 지표를 토대로 점수화하고 각국의 순위를 산출하고 있다. 세계 번영 지수는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인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960년대에는 국가 단위에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와 사회발전 지표 개발을 수행한 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OECD, UN,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게 되고 여러 국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삶의 질 지표는 대부분 공공서비스에서의 정부 정책들의 효과들을 지표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두래, 2017).

3) 정부의 질과 삶의 질

정부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이 정부의 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Helliwell & Huang, 2008; Samanni & Holmberg, 2010; Tavits, 2007; Ott, 2011).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조사기관을 통해 발표되는 국가경쟁력지수나 개별 정부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은 국가비교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Helliwell & Huang(2008)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가처분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아닌 정부의 질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이 중요한데 이를 바로 정부의 질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Kaufman 외(2003)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의 6개 영역을 평균으로 하면 주관적 웰빙(SWB)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개인적 성격의 차이를 반영해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 정부의 질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Samanni & Holmberg(2010)는 정부의 질이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OECD 국가에서도 정부의 질과 행복지표 간에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tt(2011)는 거버넌스 지수를 토대로 정부의 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과 같은 민주적 측면의 정부의 질(democratic quality)보다는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와 같은 기술적 정부의 질(technical quality)이 국민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Ott(2010)는 시민의 행복은 민주주의 질보다 거버넌스의 질과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배정현(2014)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이 국민 삶의 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삶의 질은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이자 산출물이라고 보고 있다.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안정, 참여,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등과 같은 정부의 질이 국민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다. 또한 Coggburn & Schneider(2003)는 50개의 주정부를 조사한 결과, 효율적인 정부일수록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 참여와 정부의 효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정부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할 수 있다(도수관, 2016).

한편, Tavits(2008)가 68개국의 국가별 데이터와 16개의 민주주의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패지수와 같은 정부의 질이 좋을수록 주관적인 웰빙(well-being)지표가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기(2015)의 연구에서는 51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간 비교분석한 결과,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국가의 질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 반면, 객관적 차원의 삶의 질과 주관적 차원의 삶의 질이 함께 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의 질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의 삶의 질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제성장은 객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삶의 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정인 외(2018)의 연구에서는 144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부의 질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효과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의 공정한 지배와 시민참여 및 책임성의 향상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질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배정현, 2014; 최정인 외, 2018; Coggburn & Schneider, 2003; Helliwell & Hwang, 2008; Samanni & Holmberg, 2010; Tavits, 2007). 그러나 서문기(201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삶의 질이나 개인의 행복, 웰빙과 같은 주관적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질을 설명변수로 하며 국민의 삶에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객관적, 주관적인 측면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Hollar(2003)와 Andrws & Withey(1976)의 개념을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의 삶의 질은 건강, 소득, 교육, 삶의 만족도와 같이 국민의 삶과 연관된 객관적·주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

저자명 (연도)	종속변수	대상국가	연구내용
최정인 외 (2018)	객관적 삶의 질: UNDP의 인간개발지수 중 건강과 교육 (2010년-2015년)	144개국	정부의 질적 측면 중 정부효과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법의 공정한 지배와 시민참여와 책임성의 향상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경제성장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임을 확인함
김두래 (2017)	객관적 삶의 질: 보건, 복지, 교육 (2012년, 2013년)	32개국-84개국	국가의 정치적 발전 단계보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는 정부의 작동 여부가 국민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냄
서문기 (2015)	객관적 삶의 질: UNDP의 인간개발지수 주관적 삶의 질: World Value Survey의 삶의 만족도(2014년)	57개국 (WVS, 2014 조사대상국)	경제성장, 소득분배, 국가의 질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이 방향성이 다름을 확인함
한병훈 (2015)	객관적 삶의 질: UNDP의 인간개발지수 주관적 삶의 질: Gallup World Poll의 삶의 만족도	개발도상국 77개국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을 동반한 행복과 삶의 질 향상임을 밝히며 정부역량이 정부성과를 완전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함
배정현 (2014)	주관적 삶의 질: AsiaBarometer Survey의 삶의 만족 (2005년-2008년)	아시아 8개국	정부의 질 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내찬 (2012)	주관적 삶의 질: OECD의 Better Life Index를 일부 수정한 지표	OECD 회원국 34개국	OECD 회원국의 삶의 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행한 결과,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 주요인은 주거 환경이나 소득 등을 포함한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임을 확인함
Ott (2010)	주관적 삶의 질: 행복(2006년)	127개국	거버넌스의 질이 정부 규모 보다 행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버넌스의 질과 국민의 행복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함
Tavits (2008)	주관적 삶의 질: 웰빙(Well-being)	68개국	부패지수와 같은 정부의 질이 좋을수록 주관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앞선 논의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정부의 질은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H1.2: 법의 지배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H1.3: 부패의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H2: 정부의 질은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H2.2: 법의 지배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H2.3: 부패의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H3: 정부의 질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2. 정부의 규모와 삶의 질

국민 삶의 질은 정부의 질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의 규모 등 다양한 요인들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국민 삶의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정부를 주요 행위자라기보다는 경제, 정치, 문화적 요인에 크게 의존하는 역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과 동시에 정부의 규모 역시 고려해야 할 변수 중에 하나이다. 정부의 규모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정부개혁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역량(strength)과 함께 정부의 규모(size)와 정부기능(scope)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문명재·주기완, 2007). 정부의 재원 규모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큰 정부'를 강조함으로써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준다(도수관, 2016). 따라서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영향요인인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가치가 있는 요소이다.

과거 정부의 규모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Esping-Andersen(1985)의 연구에서는 확장적인 정부, 정부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국민 삶의 만족과 복리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비해 Kim & Kim(2012)의 연구에서는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이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정부의 질과 양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의 예산과 지출 등의 정부 규모가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Bjørnskov et al., 2007; Ott, 2005; Scully, 2001; Yamamura, 2011). Bjørnskov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정부규모가 국민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국민 삶의 질은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선택론가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Ott(2005)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이전료(transfer)와 보조금(subsidies)을 통한 정부 지출 규모를 확대할수록 국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2011)의 최근 연구에서도 정부의 규모와 행복은 정부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큰 규모의 좋은 정부는 국민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규모가 크지만 나쁜 정부(bad government)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cully(2001)의 연구에서도 GDP 대비 적정 규모의 정부지출을 초과할 경우 예산 낭비로 인해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Yamamura(2011)의 일본 사례연구에서도 정부의 규모는 국민 행복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Hessami(2010)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2개의 EU 국가들의 데이터를 통해 정부의 규모와 국민의 웰빙 사이에 역U자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출과 사

회복지에 대한 더 적은 정부의 지출 규모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의 규모 확대는 국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jørnskov et al., 2007; Ott, 2005)와 적정 수준의 정부 규모를 초과하면 삶의 질이 하락한다는 연구(Hessami, 2010; Scully, 2001)를 통해 정부의 규모가 삶의 질의 주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정부의 지출 규모 확대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정부의 지출이 지나치게 부족한 국가에서는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의 규모와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정부의 규모와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

저자명 (연도)	종속변수	대상 국가	연구 내용
Hessami (2010)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1990년-2008년)	12개국 (EU국가)	정부의 규모와 국민의 웰빙 사이에 역U자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출과 사회복지에 대한 더 적은 정부의 지출 규모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인다고 설명
Bjørnskov et al. (2007)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1997-2001년)	74개국	정부지출에 따른 규모가 클수록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밝혀냄
Ott (2005)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1999-2001년)	78개국	정부가 이전료와 보조금을 통한 정부지출 규모를 확대할수록 국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보여줌
Scully (2001)	객관적 삶의 질: 기대수명, 유아 사망률, 문맹률(1995년)	112개국	GDP 대비 적정 규모의 정부지출을 초과할 경우 예산 낭비로 인해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Esping-Andersen (1985)	객관적 삶의 질: 경제성장, 실업률, 정부지출(1960-1982년)	1개국 (덴마크)	정부지출을 통한 정부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국민 삶의 만족과 복리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함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경제적 수준 등 다른 요인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4: 정부의 규모 확대는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정부의 규모 확대는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정부의 질과 규모,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연구가 단편적인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연도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특정 국가나 OECD 회원국, 혹은 개발도상국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일부 소수의 국가만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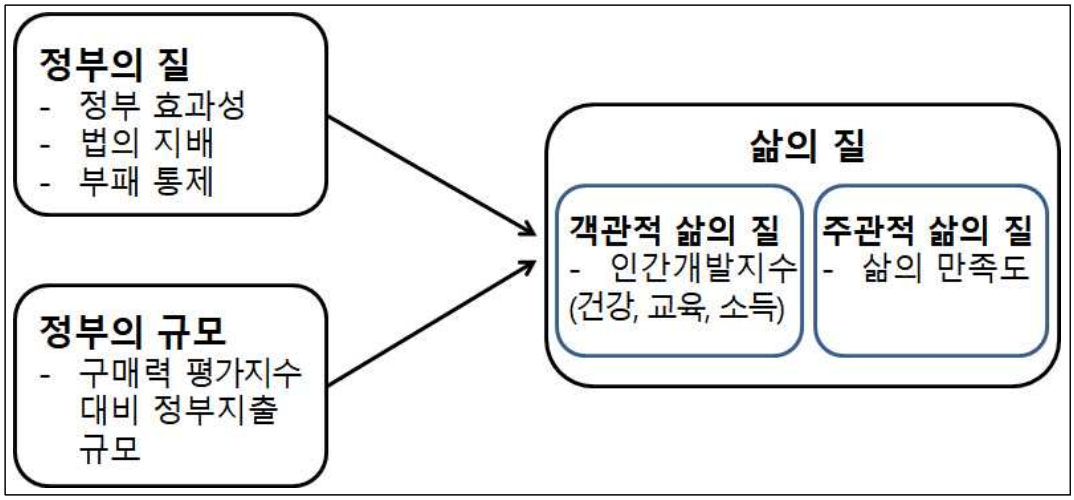
석함으로써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특정 기준에 의해 구분한 국가들을 세분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질과 규모를 중심으로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년도가 아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과 정부의 규모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연구의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로 정부의 질과 정부의 규모를 선정하였다. 정부의 질은 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수 중에서 정부 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 통제 등 세 가지 변수를 측정지표로 설정하였고, 정부의 규모는 구매력 평가지수(PPP) 대비 정부지출 규모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 삶의 질은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주관적 삶의 질은 World Database of Happiness의 삶의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그림 1〉의 연구모형을 통해서 정부의 질과 정부의 규모를 중심으로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 방법과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질과 정부의 규모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국민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TATA 11.2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1]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변수와 측정지표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첫 번째로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Veenhoven(1999)은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삶의 질이 더 낮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43개국을 대상으로 World Database of Happiness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국민의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Schimmel(2009)의 연구에서는 빈곤(poverty), 부(wealth), 발전(development) 등 높은 수준의 UNDP 개발지수가 주관적 안녕(Well-being)을 위한 필수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소득의 증가나 더 나은 건강상태,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항상 더 나은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 측면의 삶의 질 지표뿐만이 아니라 주관적 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로 구분하여 각각 인간개발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건강, 교육, 소득의 측면에서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대표 지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World Database of Happiness(WDH)에서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당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번째 종속변수인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독립변수인 정부의 질은 World Bank에서 제시하는 거버넌스 지수 중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법의 지배(rule of law),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를 바탕으로 측정한다. 정부의 질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수(Governance Indicator)를 활용하여 정부의 질을 측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김두래, 2012; 박종민·장용진, 2012; 배정현, 2014; Kaufmann et al., 2008) 거버넌스 지수를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정부의 효과성은 공공서비스와 정책의 질, 정부의 신뢰성을 측정한 지표이고, 법의 지배는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거하여 법 집행 또는 권력의 행사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의 통제는 다양한 분야의 공공부문에서 부정부패 방지의 정도를 뜻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규모는 Pennsylvania 대학의 국제비교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에서 제공하는 'Penn World Table 9.0' 자료 중 '구매력평가지수 대비 정부지출 규모(Share of government consumption at current PPPs)'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1) 패널분석은 중요한 영향요인임에도 독립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누락변수(omitted variables)가 존재할 경우 발생하는 OLS분석 추정의 불완전성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다(Wooldridge, 2010). 또한 패널그룹의 특성이 고려되어 모형 설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다중공선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패널분석 방법을 통해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는 자연,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우선 자연은 Yale University의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와 Columbia University의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가 공동으로 발표한 '생태계 건전성(Ecosystem Vitality)' 지표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요인인 인구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고, Freedom House에서 제공하는 '민주주의 수준(Level of Democracy)' 지표를 활용하여 정치적 환경을 통제하고자 한다. 이는 개별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화한 것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이 주관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1인당 GDP 변수를 활용하였다.[2] 마지막으로 시간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2014년을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개별 연도를 더미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3〉 변수 및 측정지표

구분	개념	측정지표		범위	자료출처
종속변수	객관적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 건강, 교육, 소득		0~1점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1~10점	World Database of Happiness(WDH)
독립변수	정부의 질	거버넌스 지수	정부 효과성	-2.5~2.5점	World Bank의 The World Wide Governance Indicator
			법의 지배		
			부패 통제		
	정부의 규모	구매력 평가지수 대비 정부 지출 규모		0~10점	Penn World Table의 Share of government consumption at current PPPs
통제변수	자연	생태계 건전성		0~100점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의 Ecosystem Vitality
	사회	인구수(log)		명	UN Statistics의 Population
	정치	민주주의 수준		0~10점	Freedom House의 Level of Democracy
	경제	1인당 GDP(log)		USD	World Bank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개년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측정하였다. 국가비교 데이터라는 지표의 특성으로 인해 결측치가 있어 일부 변수들의 표본수가 동일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2) 객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인간개발지수에 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GDP' 변수는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에만 활용하였다.

객관적 삶의 질 지표인 인간개발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노르웨이(2014년)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아프리카 중남부에 위치한 니제르(2000년)이다. 주관적 삶의 질 지표인 삶의 만족도의 경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값이 5.477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솟값이 2.807(토고, 2008년), 최댓값이 8.018(덴마크, 2005년)이다.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세 가지 거버넌스 지수를 살펴보면, 정부의 효과성과 법의 지배, 그리고 부패의 통제 지표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구매력평가지수(current PPPs) 대비 정부의 지출 비율로 측정한 정부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콩고(2013년)이고, 가장 규모가 작은 국가는 나이지리아(2003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2014년)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국가는 팔라우(2000년)이다. 민주주의 지수가 0점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이고, 10점인 국가에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있다. 생태계 건전성이 가장 낮은 나라는 아프리카 남부의 레소토(2014년)이고,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2014년)이다.

〈표 4〉 기술통계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	2,681	0.663	0.163	0.255	0.948
	삶의 만족도	1,063	5.477	1.138	2.807	8.018
정부의 질	정부의 효과성	2,564	-0.033	0.976	-2.324	2.429
	법의 지배	2,564	-0.044	0.994	-1.913	2.585
	부패의 통제	2,183	-0.059	0.987	-2.668	2.120
정부 규모	정부의 규모	2,490	0.190	0.091	0.016	0.954
자연	생태계 건전성	1,928	40.637	15.734	5.82	84.67
사회	인구수(log)	2,763	15.570	2.008	9.861	20.982
정치	민주주의 지수	2,770	6.589	3.092	0	10
경제	1인당 GDP(log)	2,746	8.208	1.605	4.712	12.097

2. 패널분석 결과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3] 국가비교 데이터의 특성상 변수의 결측치로 인해 각 모형마다 표본수가 동일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탐색하기 위해 패널분석 방법 중 실현가능한 일반최소자승추정(FGLS: Feasible General Least Square)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3) Breush & Pagan 검정과 Wooldridge 검정 결과 패널그룹 내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geneity)과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확인되어 패널분석 중 실현가능한 일반최소자승추정(FGLS: feasible general least square)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오차항에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가 있을시 추정량은 비효율적 추정량이기 때문에 추정계수의 표준오차에 영향을 미쳐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측정하기 위해 FGLS 모형을 사용한다(민인식 · 최필선, 2012).

첫 번째, 모형 1에서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객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정부의 질 중에서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효과성'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좋은 정책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정부의 질 개념이다(박종민·장용진, 2012). 즉,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건강, 교육, 소득 등의 객관적인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 등 거버넌스의 질이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Frey & Stutzer, 2002). 반면에 정부의 질 지표 중 '법의 지배'는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지배'라는 정부의 질은 법 집행이나 국가 권력의 행사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 집행이나 권력의 행사 과정에 초점을 두어 절차적 측면에서 정부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엄격한 법의 집행이 부패의 위험성(risk)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Shim & Eom, 2008), 법의 집행과 권력 행사가 국민이 인식하는 공정성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절차적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법의 현실 적합성이나 집행 결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부의 질인 '부패의 통제'는 전체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했을 때 객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질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정부의 질 지표 중 정부의 효과성에서만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여 가설 1.1만이 채택되고 가설 1.2와 가설1.3은 기각되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5〉 삶의 질 영향요인의 패널분석 결과

구분	변수	객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		
		전체	OECD 회원국	OECD 비회원국	전체	OECD 회원국	OECD 비회원국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정부의 질	정부의 효과성	.154***	.061***	.154***	.135*	.511**	.129
	법의 지배	-.046***	.006	-.044***	.329***	.381**	.148
	부패의 통제	.001	.002**	-.000	.033	.012	.076**
정부의 규모	정부의 규모	.130***	-.180***	.138***	-1.29***	-4.87***	-1.28***
자연	생태계 건전성	.002***	.000	.002***	-.002	-.003	-.000
사회	인구수(log)	-.005***	.002*	-.009***	.076***	-.005	.085***
정치	민주주의 지수	-.001	.029***	-.001	.005	-.113	.016
경제	1인당 GDP(log)				.291***	.011	.371***
상수		.674***	.475***	.685***	2.00***	7.701***	1.005*
표본수		1,270	262	1,007	629	163	466
대상국가수		156	33	127	130	32	102
Wald chi²		2977.7	1181.6	1278.4	934.1	249.1	320.6
Prob 〉 chi²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 *p〈0.1, **p〈0.05, ***p〈0.01*, 개별 연도(더미변수)의 분석결과는 표에서 생략함

다음으로 정부의 규모는 국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건강, 교육, 소득 등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모형 1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생태계 건전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인구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국민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고, 민주주의 지수는 부(-)의 방향을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김두래(2017)의 연구에서 보건, 학력 등의 객관적 삶의 질에 개별 국가의 정치적 발전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은 민주주의 수준이 얼마나 발전되었는가 보다는 정부의 질의 향상 수준이 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과 같이, 187개 국가 중 결측치를 제외한 156개 국가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의 효과성이 높을수록, 정부의 지출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간개발지수가 높은 것은 건강관리,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성장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국민이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UNDP, 2014).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업무 처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생태계 건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모형 2와 모형 3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정부의 효과성이 여전히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OECD 비회원국에서는 엄격한 법의 지배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회원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OECD 회원국에서는 정부의 질 중 부패의 통제가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원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부(-)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모형 2와 모형 3의 분석 결과에 따라 정부의 질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는 가설 3은 객관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패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으면 국가신뢰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 부패수준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서문기(2018)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OECD 회원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OECD 비회원국에서는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임을 볼 수 있다. 이는 OECD 회원국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 확대가 건강, 교육, 소득 등과 같은 객관적 삶의 질 지표에 속한 부문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 활용되고 있는 반면, 비회원국은 여전히 기본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건강, 교육, 소득 등에 정부의 지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모형 1을 통해서 볼 때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모형 2와 모형 3을 통해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는 가설 6은 객관적 삶의 질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한하여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생태계 건전성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OECD 비회원국 중에서 인구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OECD 회원국 사이에서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 수준과 지속 정도가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Inglehart(1990)의 연구 결과가 소득 수준이 다른 국가군에서 다른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모형 4에서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정부의 질 중에서 정부의 효과성과 법의 지배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질이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부패의 통제를 제외한 정부의 효과성과 법의 지배 등 두 가지 지표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여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가설2.1과 가설2.2는 채택되었고,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정부의 규모 확대가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형1과는 달리 정부의 규모는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jørnskov et al.(2007)의 연구에서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결과를 보여준 것과 동일한 논의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매력평가지수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중 어떤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생태계 건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지만 부(-)의 방향성을 나타냈고, 국가의 인구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주의 지수는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진 못하였다. 이는 행복이라는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민주주의 수준과 같은 정치적 요인보다는 정부의 거버넌스의 질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Ott(2010)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Hagerty & Veenhoven(2003), Stevenson & Wolfers(200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모형 5와 모형 6에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5를 살펴보면, 정부의 효과성과 법의 지배는 주관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정부의 규모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규모는 OECD 회원국의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 모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인구수는 주관적 삶의 질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GDP는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OECD 비회원국의 경우, OECD 회원국과는 달리 정부의 질 중에서 부패의 통제가 잘되는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고, 인구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Tavits(2008)의 연구에서 정부의 부패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안녕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이는 OECD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위의 결과는 부패에 대한 인내력이 부패의 수준과 함께 높아져 경제적 자유는 감소하고 행복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임을 확인하였다(Arvin & Lew, 2016). 이를 통해 정부의 질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는 가설 3은 주관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했을 때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OECD 비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회원국의 경우 1인당 GDP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패널분석을 통해 가설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6〉 가설검정 결과

구분	가설	채택여부
정부의 질	H1: 정부의 질은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1.1: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H1.2: 법의 지배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H1.3: 부패의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H2: 정부의 질은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2.1: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H2.2: 법의 지배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H2.3: 부패의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H3. 정부의 질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부분채택
정부의 규모	H4. 정부의 규모 확대는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 정부의 규모 확대는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6. 정부의 규모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부분채택

V. 결론

다양한 국제 지표의 개발과 더불어 국가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정부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의 질과 삶의 질의 중요성과 정의에 대해 논의한 후, 정부의 질과 규모를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영향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탐색하

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에서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줌과 동시에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공유해나가야 할 주요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삶의 지표인 건강, 교육,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정부의 효과성과 정부의 규모,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정부의 질 중에서 법의 지배가 객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격한 법의 집행이나 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법과 현실과의 괴리 또는 부패의 문제 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경우, 정부의 효과성과 부패의 통제 수준이 객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법의 지배 수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 제시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OECD 비회원국의 경우에는 객관적 삶의 질에 법의 지배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를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법의 준수와 권력의 행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법 집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 간의 괴리가 나타나는지, 이러한 문제가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정부의 효율성 이외에도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질적 측면을 강화해야 하는지와 현재 정책방향의 전환과 정책 집행과 현실과의 괴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의 질은 정부의 효과성과 법의 지배로 나타났고, 부패의 통제는 OECD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OECD 비회원국에서는 정부의 효과성과 법의 지배가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부패지수와 같은 정부의 질이 향상될수록 주관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Tavits(2008)의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OECD 회원국에서는 정부의 부패의 통제 강화가 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와 정부에 요구하는 질적 측면이 OECD 비회원국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규모는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인 반면, 주관적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출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회원국의 경우 정부의 지출규모 확대가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 모두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OECD 비회원국에서는 정부의 규모 확대가 객관적 삶의 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삶의 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별로 정부지출의 세부 항목과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인당 GDP를 통해 경제적 요인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OECD 회원국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OECD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

석결과에서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세부적으로 제고시켜나가야 할 정부의 질의 유형과 정부의 규모 확대 혹은 축소 여부가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생태계 건전성과 인구구조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관리를 지속해나가야 함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교육,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 웰빙,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인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객관적 삶의 질만을 강조하며 이러한 부문에만 정부의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주관적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객관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인 삶의 질만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정부의 질을 제고시키고 정부의 지출 항목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정부의 입장에서 당면한 과제이자 미래의 전략방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 세계의 국가와 개별 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인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전달하는 국정운영의 방향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정부의 질과 규모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객관적 삶의 질이나 주관적 삶의 질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탐색한 것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가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질적 측면 중에서 일부 요소만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국가비교연구의 특성상 개별 국가의 특정한 상황이나 이슈 등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1-30.

김두래. (2017). 정부의 대표성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공공서비스 정책효과의 국가 비교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6(2): 311-334.

_____. (2012). 정치체제, 정부의 질, 그리고 정부성과: 합의체제 수월성 가설의 수정과 검증. 「정부학연구」. 18(1): 55-78.

김병섭·최성주·최은미. (2015).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연구. 「한국행정학보」. 49(4): 97-122.

김태형·장용석. (2014). 정부개혁의 유형 및 패턴에 관한 국가비교연구: 정부의 역량과 개혁의 강

도를 중심으로, 1980-2010.「한국행정학보」. 48(3): 175-204.
도수관. (2016).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의 관계 유형과 정부의 질.「지방정부연구」. 19(4): 295-318.
_____. (2015).「사회자본과 경제발전 그리고 정부의 질」. 서울: 집문당.
문명재·주기완. (2007). 정부의 규모(Size), 기능(Scope), 역량(Strength)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행정논총」. 45(3): 51-80.
민인식·최필선. (2012).「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박종민·김서용. (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아세아연구」. 45(2): 141-164.
박종민·장용진. (2012).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정부학연구」. 18(1): 3-22.
서문기. (2018). 부패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을 중심으로.「아시아리뷰」. 7(2): 3-31.
_____. (2015).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삶의 질에 관한 국가간 비교분석.「한국사회학」. 49(1): 111-137.
배정현. (2014).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행정논총」. 52(1): 247-270.
최상옥. (2012). 정부의 질 연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역량 개념의 탐색적 고찰.「정부학연구」. 18(2): 77-97.
최정인·김태형·정세희·문명재. (2018). 정부의 질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21(4): 391-409.
Acemoglu, D. & J. Robinson. (2008). The Role of Institutions in Growth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Arvin, M. & Lew, B. (2016). Doew Income Matter in the Happiness-Corruption Relationships?.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41(3): 469-490.
Bjørnskov, C., Dreher, A., & Fischer, J. A. (2007). The Bigger the Better? Evidence of the Effect of Government Size on Life Satisfaction around the World. *Public Choice*, 130(3): 267-292.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Coggburn, J. D. & Schneider, S. K.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Government Performance and Stat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12): 1337-1354.
Dahlberg, S., C. Dahlström, V. Noreel, & J. Teorell. (2011).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Quality of Government Survey 2008-2010: A Report.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University of Gothenburg.
Diener, Ed & Eunkook Suh.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 189-216.
Esping-Andelsen, G. (1985). Government Responses to Budget Scarcity: Denmark. *Policy Studies*

Journal, 13(3): 533-546.

Frey, B. S. & Stutzer, A.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466): 918-938.

Glaser, M. A., Aristigueta, M. P., & Payton, S. (2000). Harnessing the Resources of Community: The Ultimate Performance Agenda.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30(6): 596-601.

Hagerty M. R., & Veenhoven R.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 1-27.

Helliwell, J. F., & Huang, H. (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4): 595-619.

Hessami, Z. (2010) The Size and Composition of Government Spending in Europe and Its Impact on Well-Being. Kyklos, 63(3): 346-382.

Hollar, D. (2003). A holistic theoretical model for examining welfare reform: Quality of lif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1), 90-104.

Knack, S. (2002).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772-785.

La Porta, R., Lopez-de-Silanes, F., Shleifer, A. & Vishny, R. (1999). The Quality of Govern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5(1): 222-279.

Lin, K. (2013). A Methodological Exploration of Social Quality Research: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Quality Approaches. *International Sociology*, 28(3): 316-334.

Ott, J. C. (2011). Government and Happiness in 130 Nations: Good Governance Fosters Higher Level and More Equa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2(1): 3-22.

_____. (2010).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in Nations: Technical Quality Precedes Democracy and Quality Beats Siz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3): 353-368.

_____. (2005). Level and Inequality of Happiness in Nations: Does Greater Happiness of a Greater Number Imply Greater Inequality in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4): 397-420.

Pawar, M. S., & Cox. D. R. (Eds.) (2013). Social Development: Critical Themes and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ice, T. W. (2001).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Performance in Iowa Communities. *Journal of Urban Affairs*, 23(3-4): 375-389.

Rothstein, B. & Teorell, J. (2008). What Is Quality of Government?: A Theory of Impartial

Government Institutions.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 21(2): 165-190.

Ronald Inglehart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manni, M., & Holmberg, S. (2010). Quality of Government Makes People Happy. QoG Working Paper Series, 1.

Schneider, M. (1975). The quality of life in large American cities: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 495-509.

Schimmel, J. (2009). Development as Happines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appiness and UNDP's Analysis of Poverty, Wealth and Developmen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1): 93-111.

Scully, G. W. (2001). Government Expenditure and Quality of Life. *Public Choice*, 108(1): 123-145.

Shim, D. C., & Eom, T. H. (2008). E-Government and Anti-Corruption: Empir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1(3): 298-316.

Stevenson, B., & Wolfers, J. (2008). Happiness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Jounal of Legal Studies*, 37(2): 33-79.

Stock, W. A., Okun, M. A., & Benin, M. (1986).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2): 91.

Tavits, M. (2008). Representation, Corru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12): 1607-1630.

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Veenhoven, Ruut. (1999). Quality-of-Life in Individualistic Society: A Comparison of 43 Nations in the Early 1990'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8(2): 159-188.

Wooldridge, J. M. (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Yamamura, E. (2011). The Influence of Government Size on Economic Growth and Life Satisfaction: A Case Study from Japan. Japanese Economy, 38(4): 28-64.

Zagorski, K., Kelley, J., & Evans, M. D. (2010). Economic Development and Happiness: Evidence from 32 Nations. *Polish Sociological Review*, 169.

김태형(金泰亨):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연구 관심분야는 조직, 공공관리, 정책수단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Using Social Enterprises for Social Policy in South Korea: Do Funding and Management Affect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2017)", "정책홍보·정책수단·정책산출 그리고 정부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정부학연구, 2017)"가 있다(taehyung@yonsei.ac.kr).

최정인(崔正仁):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관리, 정부성과, 정책분석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의 대응전략(지방정부연구, 2017)",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7)"가 있다(choejungin@naver.com).

정세희(丁世喜):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관리, 재난관리, 위기관리 등이다. 주요논문으로는 "지식공유와 성과간의 인과구조: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지식공유의 결정모형과 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지방정부연구, 2017)"이 있다(joungsh17@naver.com).

문명재(文命在):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공공관리, 전자정부, 행정수단, 조직론, 리더십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Insights from Experiments with Duopoly Games: Rational Incremental Decision-Making(Public Management Review, 2017)", "Evolution of Co-Production in the Information Age: Crowdsourcing as a Model of Web-Based Co-Production in Korea(Policy and Society, 2017)" 등이 있다(mjmoon@yonsei.ac.kr).

〈논문접수일: 2018. 4. 13 / 심사개시일: 2018. 4. 16 / 심사완료일: 2018. 5. 4〉

〈부록〉 지역별 국가명

지역	국가명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리츠고비나,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영국,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메리카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미국, 바하마,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안티쿠아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 아일랜드, 키리바시,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호주
아시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요르단, 아랍 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카타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한국
중동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아프리카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라이베리아, 레소토,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로코,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적도 기니,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케냐, 카보베르데, 카메룬,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Abstract

The Impact of Quality and Size of Government on the Quality of Life: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Kim, Taehyung

Choe, Jungin

Jung, Sehee

Moon, M. Jae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re directly linked to the people's life. Among the indicators that measure the quality of life announc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vast majority of them show the policy effect of government. The quality of 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life are the main issues to be discussed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quality and size of government on subjective and objective quality of life. Data from 187 countries from 2000 to 2014 were looked into, and FGLS(Feasible General Least Square)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effectiveness, size of government, and ecosystem vitality have positive effects on objective quality of life. while the rule of law and the population of individual countries have negative effects on objective quality of life.

Key Words: Quality of Government, Size of Government, Quality of Life, Human Development Index, Life Satisfaction